

경찰 단신

「APEC 정상회의」 관련, 세련된 警察活動 極讚

- 연인원 58만명과 장비 9천여점 투입해 완벽 경호 -

국제행사에 걸맞는 경호 활동

경찰청은 행사장인 BEXCO·누리마루와 각종 정상숙소가 인구 360만의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누구든 접근이 쉬운데다가 정상 이동로의 교통정체가 심하여 어려운 경호여건이었지만 연인원 58만여명의 경찰력과 각종 장비 9천여점을 투입하고 정상이동시 전용로를 운영하여 총 883회에 이르는 경호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특히, 외국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는 정상들이 모두 도착하는데 30~40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행사는 정상 1명당 1분 간격으로 도착한다는 원칙에 300여명의 교통요원이 한달간 합숙하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한 결과 1차 정상회의에 16분, 공식 만찬에 21분, 2차 정상회의에 20분이 소요되어 행사가 끝난 후 각각 정상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일본 경호팀은 한국경찰의 세련되고 빈틈없는 경호기법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치의 오차 없는 對테러 활동

한국이 이라크 3대 파병국이고 미국·일본을 포함한 2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안전은 최대 관심사였다.

경찰청은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테러대응시스템을 확충하였으며 670여회에 걸친 테러대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에 대비한 반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완벽한 테러예방을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시민의 경각심과 신고의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5천여명의 시민안전봉사대원이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경찰과 함께 테러대 안전활동을 수행한 것을 매우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는 여러 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임수를 완수해 준 전국의 경찰관과 전·의경들의 숨은 노고가 컸다.

특히, 이번 행사에 앞서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험이 고조되고 대규모 APEC 반대집회가 예상되었으며, 행사를 며칠 앞두고 과격한 농민시위가 발생하여 행사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어 경찰청은 올 한해 치안활동의 성패가 APEC 행사성공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경찰이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총력치안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특공대원들의 대테러 활동 장면.

의미있는 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스코틀랜드 G8 정상회의시 영국 경찰력이 행사장에 집중되자 수도 런던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성명서 발표가 하루 연기되었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행사기간동안 수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치안을 확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 경찰관과 전의경이 휴무와 휴가를 중지하고 지구대 근무를 3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하는 등 총력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테러에 완벽히 대비했다.

대규모 집회시위 완벽 차단

17일에는 경주에서 한미정상회담 반대집회, 18~19일에는 해외 NGO 500여명을 포함 최대 10만여명이 참가하는 1·2차 APEC 반대 범국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며, 학생운동권은 미·일 정상 방한에 맞추어 전국의 주요시설을 기습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경찰청은 대규모 시위대가 부산시내에서 행사장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사장 주변에서 기습시위를 할 경우 행사에 지장을 줄 것이 분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외국에서 집회관리에 실패한 사유가 NGO 활동에 대한 사전 정보파악이 미흡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하였고, 최후단·고무총 등 초기부터 과잉대응함으로써 격렬한 시위를 촉발하였다는 사례를 교훈삼아 중요한 국가행사를 한치의 차질없이 경비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초긴장 상태에서 4개월에 걸쳐 집회관리를 준비했다.

이와관련 경찰청은 우선, APEC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반대단체를 상대로 3,100여회에 걸쳐 집중설득하였고 시위참가자가 우려되는 해외 NGO 2,000여명을 입국제한 조치하였으며, 경찰청장 기자회견을 통해 '법질서 준수'를 촉구하고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초 10만여명으로 예상되던 집회인원이 실제로는 1만 2천여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치안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APEC 행사장 반경 1.5km 이내 지역을 특별치안강화구역(Clean Zone)으로 설정하여 집회시위를 특별관리했다.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집회시위는 자체토록 설득하되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충분한 경력으로 대비하였고, 불법집회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여 행사방해 시도를 철저히 예방했다.

이를 위해 이미 8월에 APEC 반대집회 전담부대를 전국 각 지방청 정예부대로 지정 집중 교육·훈련 등 전문화 하였고, 2회에 걸쳐 지휘요원 현지 Workshop을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폭력시위 대응훈련을 하였다.



허준영 경찰청장 시위진압부상 경찰관 위문

허준영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병원을 방문하고 APEC 쟁개방 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대회 폭력시위현장에서 부상당한 전·의경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이번 농민대회에서는 218명의 전의경들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안병하 前 전남도경국장 국립묘지 안장

경찰청은 지난 11월 24일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인, 유가족 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은 안병하 前 전남도경국장(경무관)의 유해를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봉행하는 안장식을 가행했다.

치안소식지 '참소리' 좋은 반응

전남무안署, 민·警 가교 역할



전남 무안경찰서가 최근 주민들에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목표로 발간한 치안소식지 '참소리'가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간된 '참소리'는 8면으로 격월로 발행하는데, 경찰소식, 선행미담, 검거활동, 생활상식 등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과 경찰이 한결 가까워지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소식지가 창간되자 서삼석 무안군수를 비롯한 기관장과 지역주민들은 경찰홍보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치안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로 '민·경 가교지 역할 기대한다'며 축하와 격려를 보내 왔다.

또한 내부적으로 경찰서 관할이 행정구역 중심의 경찰 관할과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피의자 이중인계 부담이나 사건 오송률(誤送率)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관할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계선 상의 관할 혼선과 사건 지연 처리 등이 해소되는 등 이번 관할조정을 계기로 내부 업무효율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경찰서 관할구역조정 및 명칭 변경' 시책은 2006년 하반기 시범 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준비 단계로서의 의미와 궁극적으로는 치안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할조정 확정안은 내년 2월까지 4개월 여간의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 후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졸업후 진로

마약범죄수사기관 수사요원 활동 및 지역사회의 약물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약물재활 복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취득함으로써 사회복지 기관에도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기관	담당직무
교정기관	전국 소재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강사	각급학교 약물 예방 교육 강사
기관	설립 및 운영 약물 치료 및 재활 분야 기관 설립 및 운영
유학	본 학과와 학점 교류 기관인 워싱턴주 주립대학인 'Eastern Washington University'로 유학
사회복지관련기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고용안정센터, 각종 연금기관
사회복지공무원	시정 및 구청의 사회복지분야(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부녀복지과)
시민단체 기관	NGO, NPO, 청소년 선도기관, YMCA, YWCA 등
기업체	사회복지실 및 기업복지재단
의료기관	종합병원, 보건소, 의료센터의 사회사업실
진학	국대의 대학교 대학원 진학 및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연구 활동

◎ 취득학위 및 자격증

취득학위 및 취득 자격증

- 약물재활복지학사
- 사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증 취득
- '마약지도사' 자격취득. 현재는 민간자격기본법에 의해 자격증 발행(국가자격증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명칭)

경찰 야구단 창단

내년 프로야구 2군 정기리그부터 참가



경찰청은 지난 12월 1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경찰 야구단」 창단식을 갖고 김용철 前 롯데 감독대행을 초대 감독으로 임명하는 한편 내년 프로야구 2군 정기리그부터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경찰 야구단」 감독선발은 경찰청이 KBO와 야구관계자들로부터 총 9명을 추천받아, 감

독선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발되었고, 선수선발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선수(의경) 원서접수를 받는데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또 다시 이틀간 실기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명칭 변경 확정

내년 3월 1일부터 전격 시행

경찰청이 지난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개월여 간의 논의·검토와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관할구역조정은 전국 233개 경찰서 중 행정구역과 불일치한 54개 경찰서를(1區 2署 등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경찰서 제외) 대상으로 추진하여 그 중 41개 경찰서를 변경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는 행정구역과 불일치한 25개서 중 서대문·청량리서 등 19개 경찰서를 1區 1署로, 종로·강남서를 비롯한 12개 경찰서를 1區 2署로 조정하는 등 31개 경찰서 중 25개를 조정하였으며, 관할조정과 병행하여 서울동부서를 서울광진서로, 서울남부서를 서울금천서로 변경하는 등 경

찰서 명칭도 자치단체(행정구역)와 일치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번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사회적 비용 감소와 편의 증대 효과를 거두게 되며, 여러 자치단체를 관할하던

경찰서 관할과 명칭을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와 일치시킴으로써 지역안에 대한 일체감 형상으로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며, 지역경찰서간 치안서비스 경쟁체제가 강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칭 바뀌는 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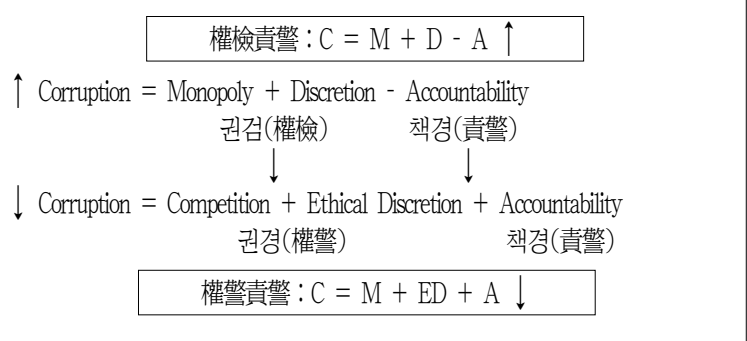
지방청	현행	변경 후	지방청	현행	변경 후
서울	서울동대문	서울에화	경기	성남중부	성남수정
	서울청량리	서울동대문		성남남부	성남중원
	서울노랑진	서울동작		청주동부	청주상당
	서울동부	서울광진		청주서부	청주흥덕
	서울북부	서울강북		조치원	연기
부산	서울남부	서울금천	전북	전주중부	전주완산
	부산연산	부산연제		전주북부	전주덕진
울산	울산서부	울산울주			

搜查權 調整의 核心 論議

〈1면에 이어〉
〈公準3〉

권한의 독점과 재량의 남용 그리고 책임의 회피는 반드시 부패를 낳는다. 부패적절, 유전무죄·무죄유죄의 한(恨)을 남기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한독점(monopoly)을 경쟁체제(competition)로 하고 재량남용을 윤리적 재량으로 세밀화·자인방식으로 바꾸고 책임체제를 경쟁체제로 각각 강화해야 한다.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公準4〉
현행 검찰의 수사권독점과 관련

된 '영장청구' 제도(헌법 12조 3항)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역할을 위한 정치로 비(非)대의기관에 의해 헌법규범화시킨 비(非)민주적 악법이다.

지금 민주화된 국회에서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정책산출이겠는가.

절차규정인 영장청구제도가 본 규범내용으로 어떻게 헌법규범에서 형사사법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산물을 과거사 정리차원에서라도 빨리 개헌해야 하

【헌법 12조 3항의 영장청구제도의 변화과정】

- ※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 3공화국(1962): 국가재건 최고회의 → 국민투표: "검찰관의 신청"
- 4공화국(1972): 유신헌법: "검사의 요구"
- 5공화국(1980): 대통령 직선개헌: "검사의 신청"

〈公準5〉

독점의 폐해는 피지배독점 기관이나 기업의 독창적 Blue Ocean 전략을 말살시킨다. 기업이든 기관이든 독점적 지위에서는 영세기업이나 하부기관을 '하청업자'로만 취급함으로써 이들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혁신을 본질적으로 망가뜨려 독립기관의 자행을 조장한다.

독점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가격이나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나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므로 혁신시대를 사는 참예시대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입법이나 당사자인 검찰이 스스로 알아야 하리라 확신한다.